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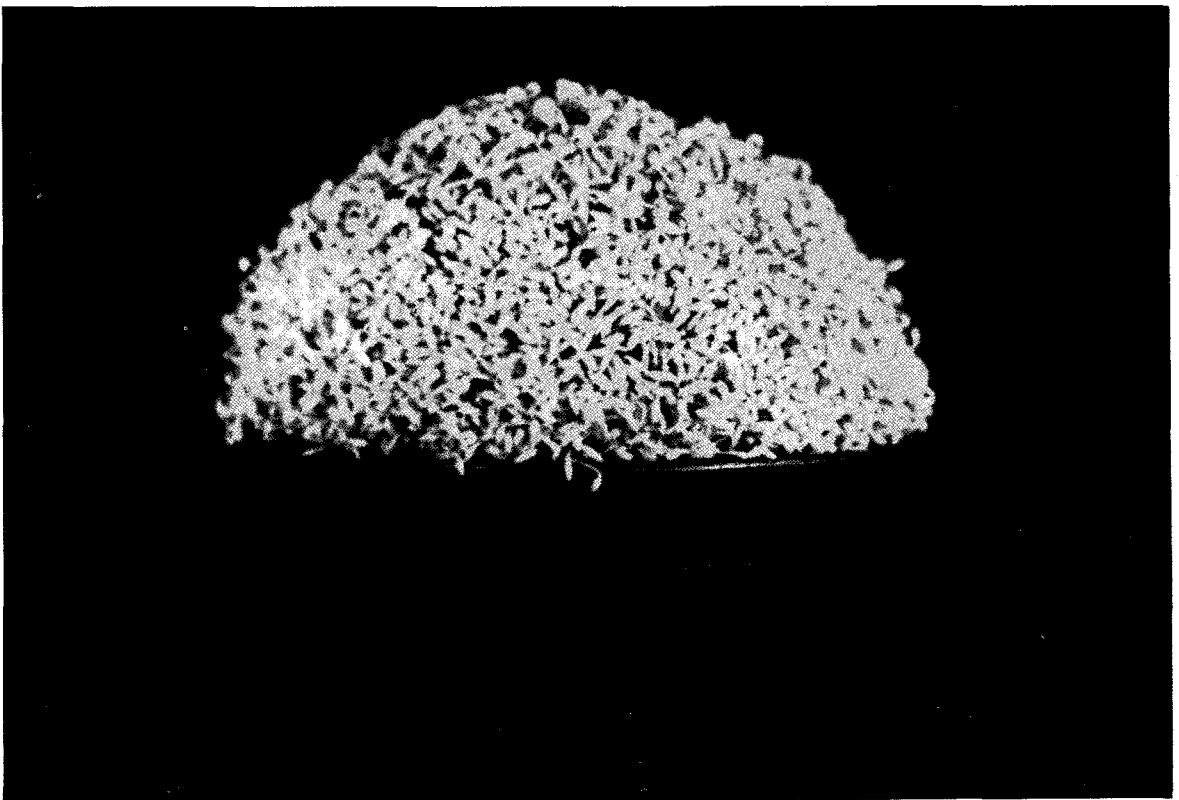
# 콩나물에 관한 규격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韓國豆菜協會 企劃弘報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라함은 모든 음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콩나물은 배추나 무와 같이 분명히 채소류, 즉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재배중에 있는 농산물은 사람이 직접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 음식물의 재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콩나물은 식품일까? 농산물일까?



## 1. 콩나물의 실체도 모르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어느날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모업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바꾸어준다. 그 업자의 말인즉 금방 12시 라디오 뉴스에서 콩나물의 농약 사건이 보도 되었다는 것이다.

「인돌비」라는 성장조절제를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2명의 업자를 입건하였다고 하는데 「인돌비」는 콩나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있는데도 왜 이런일이 터지도록 막지를 못하고 협회 가 무엇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이다.

그날 오후에 계속하여 전화통이 불이 난것은 물론이다. 이 사건은 유해식품 단속을 나왔던 경찰관이 콩나물 재배업소를 찾아갔을때 「인돌비」를 발견하고, 거기에 농약이라고 쓰여 있는것만 가지고 우선 진술서를 받아 놓은것이 출입기자에게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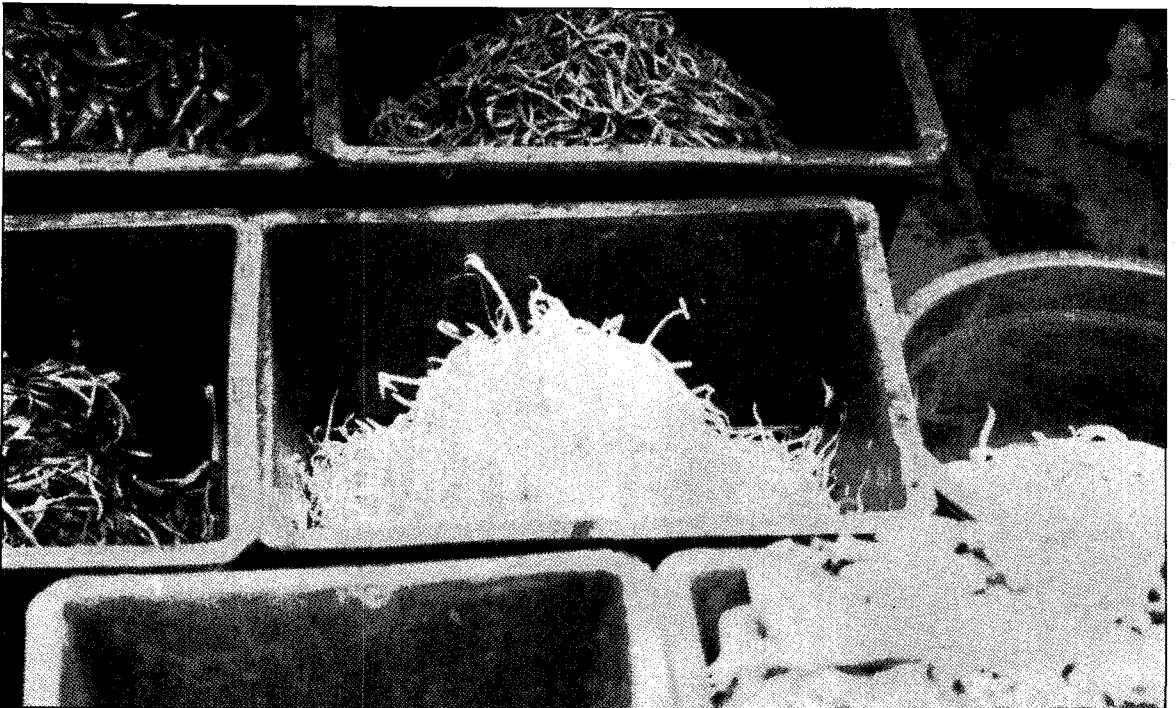
되어 확인도 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보도부터 해버린 것으로 판명이 되고 이것을 사과하고 해명한바 있으나, 이미 그 사건이 일부 신문에 기사화 되어 버려 다시 주위 담을 수 없는 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으니, 콩나물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당국과 언론의 무지를 통탄 할 수 밖에 없는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외중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업자의 전화 내용이다.

경찰서에서 왔으며 콩나물 제조 허가증을 내놓으라고 하더니 무조건 집안을 뒤지더라는 것이다.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각 경찰서에 유해식품 단속령이 하달이 되었고 그 중에 콩나물도 포함되어 있음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콩나물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보통 큰일이 아닌가?



위생당국이 콩나물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식품”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규격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덮어놓고 콩나물 재배업소를 찾아다니며 콩나물 제조허가증이나 내놓으라고 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연구기관의 실험을 거쳐 콩나물이 식품 제조가 아니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약으로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돌비」가 농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입건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속을 펼친다면, 업자들의 곤욕은 차제하고라도 세인들의 오해로 인한 파문은 또 얼마나 클것이며, 그로 인하여 콩나물은 얼마나 큰 수난을 겪어야 할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2.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으로 허가하고 관리하는 업종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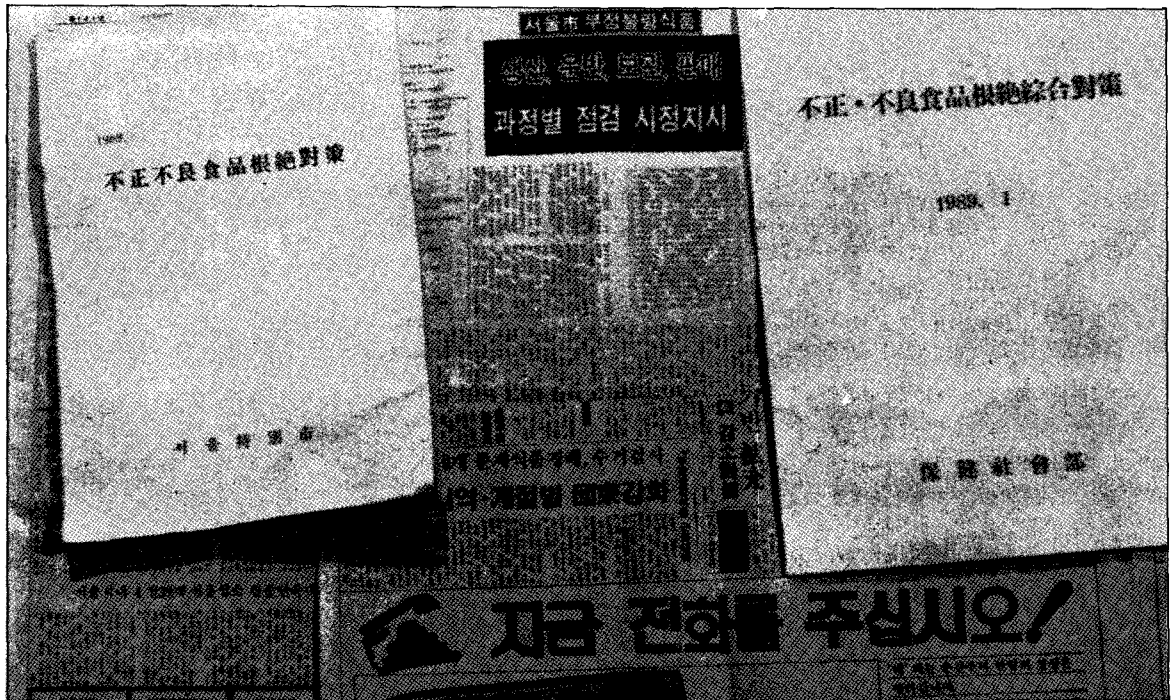
**이** 미 수십차례에 주장한 바와같이 콩나물은 콩 종자에 싹을 내어 길러먹는 농산물로써 채소

류에 속한다.

이것을 시설물에 의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의 표준산업분류에서도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2조7호의 「영업」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농산물인 콩나물이 제외되어 버린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콩나물 재배업을 하려고 할때 식품위생법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조 또는 가공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것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기관도 없다. 다만 콩나물이 농산물이며 채소류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채소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이나 사법공무원들이 콩나물을 단속하겠다고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있다. 이러니 행정이 부재하고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으며, 집행상에 무지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금년도를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로 설정하여 단속중에 있다. 국민건강에 해가될 콩나물이 있다면 마땅히 단속하여야 하겠지만 현상태에서 「식품위생법」의 적용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식품가게에도 또 야채가게에도 콩나물이 진열되어 있다. 그래서 위생당국이 콩나물행정지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일까?……(사진은 기사안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이것은 콩나물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인것 같다. 그저 콩나물에 관하여 알고있는 정도가, 제조되는 것으로, 또는 농약을 첨가 하는 것으로, 또는 심지어 폐수로도 기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고작으로, 그들에게 콩나물의 실정과 실체를 바로 알리려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만큼 고정관념에 젖어 있음을 느낄때가 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보도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과장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한 콩나물 업자들의 타격과 소비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어쩌면 콩나물 자체까지도 말살시켜 버리고마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 3. 콩나물의 규격과 기준은 무엇인가?

**유**해 식품을 단속하려면 먼저 그 대상 품목을 수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해물질을 분석검사하고 유해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유해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는 그 판정 기준이 있어야만 해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것인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콩나물을 단속하는것도 마찬가지다.

먼저 콩나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물론 수거를 할 수 있는 검체의 규격이 있어야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그 검체의 규격은 무엇인가?

종자으로써 불리어 놓은 콩도 수거해가고, 짧은것 이라야 검출될 수 있다며 다 자라지도 않은것을 수거해간다. 그래서 콩나물 재배업자들은 농약을 사용하였던, 안했던간에 단속만 실시하면 불안하다. 종자인 콩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다면, 그 잔류량이 검출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수십차례에 걸쳐 당국에 건의하고 진정한바 최근에는 상품가치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또는 유통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자로 불리어 놓은 콩을 또는 짧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콩나물을 수거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규격이 없기 때문에 빗어지고 있는 무지한 처사이며, 법률적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수거를 해가는 것이므로 엄격히 따져서 합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콩나물의 유해여부도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즉 기준치를 정하고 그 기준치에 의하여 폐기처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규제의 한계선이 분명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보건사회부에 질의한바 식품공전을 참조하라는 회시답변이 왔기에 식품공전을 구하여 아무리 찾아보아도 콩나물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구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잠정 규정으로 총 수은 함량이 0.1PPM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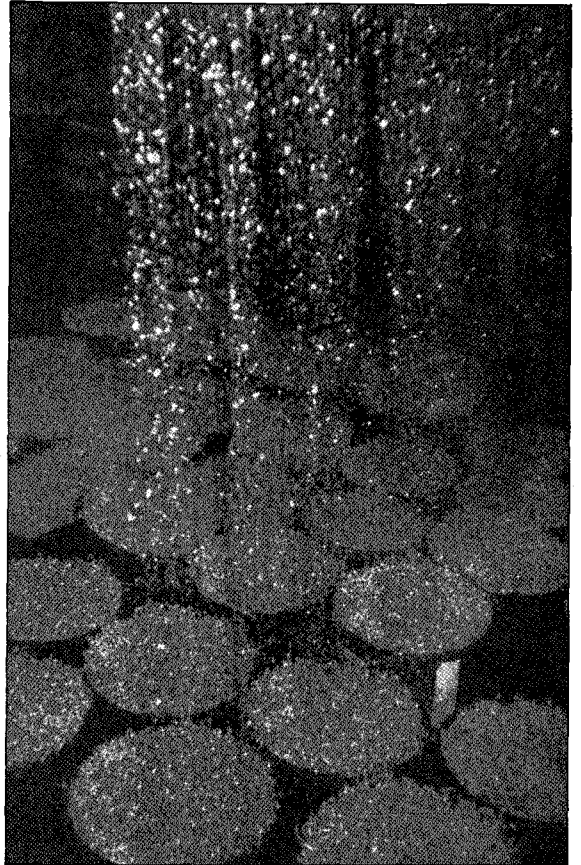
실제로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혹시라도 자기의 콩나물에서 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을까 하여 보사부 산하 연구기관에 검사하여 줄것을 의뢰해 보아도 이 규정에 있는 수은 검사만 해줄 수 있다고 할뿐, 다른 성분의 검사는 규정이 없다하여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이미 수은계 농약이 사라졌고, 콩나물에서도 수년간 수은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콩나물을 검사할 때도 맞지 않는 이 잠정규정도 마땅히 개정내지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4. 농산물과 첨가물

**식**탁에 올라와 있는 배추나 오이나 딸기 등에 농약을 살포한다면, 이것은 식품에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을 살포한다면 그것을 사람이 먹는 식품에 유해물질을 첨가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식탁위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마땅히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재배과정에서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콩나물이 발아되면 재배용기에 앉힌후 지하 수심 메타에 서 끌어올리는 맑은 지하수만을 살포하여 재배되고 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식품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재배하는 농산물이 아니고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원형질을 변화시켜서 제조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배 과정에 있는 농산물을 사람이 직접 먹고 마시는 「음식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 음식물의 재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생명을 키우는 것이다.  
 때문에 그 생명체가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정이 있다. 콩나물도 농산물이며 생명을 키우는 재배에 속한다.

따라서 혹시라도 콩에 중차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첨가물을 사용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단, 콩나물의 재배가 시설물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수경재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기계에 의해서 제조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을 뿐이다.

이제 늦은감은 있으나, 보건사회부에서는 콩나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콩나물의 실체를 바늘구멍 만큼이라도 이해하기 시작 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콩나물의 실체도 제대로 인식하여 보지않고, 명확한 법률적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농약콩나물로 매도했던 원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나, 그 틀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깊은 늪속으로 빠져버린 관료주의적 고정관념이 쉽게 깨어질런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밖에 보지 못하고 질타만 했던 언론들의 편견과 특종 의식이 쉽게 바뀌어 질런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들리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소비자들의 오해가 쉽게 풀어질런지는 더욱 의문이다.

먼저 콩나물의 규격과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치가 설정된다면 업자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여 콩나물의 재인식과 신뢰회복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